

사토 에이사쿠의 한일국교정상화 추진

김 경 호*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 | III. 사토 에이사쿠의 대한외교 |
| II. 한일기본조약 이전 한일교섭 | 1. 사토 에이사쿠의 정치활동 |
| 1. 1950년대 한일교섭 | 2. 한일기본조약 조인 |
| 2. 1960년대 한일교섭 | IV. 나오는 말 |

<국문초록>

이 글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조인 당시 일본 총리였던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를 중심으로 현대 한일관계사를 새롭게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그 시대적 배경이 되는 1950년대~60년대 초 한일교섭 양상을 살펴보고, 사토의 생애와 정치활동을 검토했다.

1951년부터 시작된 한일 양국의 국교정상화 교섭은, 한국과 일본을 연대시켜 공산진영에 맞서려는 미국의 의도가 작용했다. 그러나 당시 청구권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서 한일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이승만 대통령 하야 및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총리의 사퇴로 중단되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1960년대에도 한국과 일본은 한일국교정상화를 성사시키고자, 청구권문제나 어업문제 등 민감한 현안 타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게 되었다.

* 한국, 영남대학교 동아시아문화학과 박사과정.

1964년 11월 성립된 사토 내각은 출범 한 달 만에 한일회담을 재개하여 한일국교정상화를 조속히 추진했고, 회담재개 후 불과 6개월 만인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 조인에 이르렀다. 이것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 정계의 '적극파'이자,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협조적이었던 사토 에이사쿠의 집권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사토 에이사쿠는 한일국교정상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한일관계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사토 에이사쿠, 한일관계, 적극파, 외교, 한일국교정상화

I. 들어가는 말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1901~1975)는 일본의 제61~63대 내각총리대신을 지낸 인물로 1964년 11월부터 1972년 7월까지 무려 7년 8개월 동안 총리로 재임했다. 사토 총리는 재임 기간 동안 한일기본조약 체결, 비핵전수방위원칙 확립, 고도성장, 오키나와 반환협정 조인 등의 성과를 냈고, 퇴임 후인 1974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사토 총리가 미국으로부터 오키나와를 반환받은 것이 주요 업적으로 재조명되었다.¹⁾ 아울러 한국과의 외교문제 해결에 힘썼기에, 그의 대한외교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李炯喆은 사토 내각의 대한외교가 한국을 반공국가로서 자립하게 하고, 일본은 아시아 리더의 지위를 굳히고자 한 현실외교였다고 평했다. 谷川栄彦은 미국이 자유세계 방위 협력체제에 일본이 주축이 되기를 요구했고, 이에

1) 오키나와 반환과 관련해서는 中島琢磨, 〈初期佐藤政権における沖縄返還問題〉, 《法政研究》 73(3), 2006; 野添文彬, 〈1967年沖縄返還問題と佐藤外交〉, 《一橋法学》 10(1), 2011; 宮川徹志, 《佐藤栄作最後の密使》(東京: 吉田書店, 2020) 등이 있다.

사토 내각이 동의한 것이 한일회담의 진전 배경이었다고 보았다. 加藤淳平은 사토가 적극적인 수뇌외교로 한일국교정상화를 성공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原朗은 사토 내각이 한일기본조약을 조인했으나 이미 이케다 내각이 기본적 합의를 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²⁾

그러나 사토가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주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저명한 정치가로서 한국과도 관련이 깊은 사토 에이사쿠에 대한 연구 자체가 부족하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의 골자인 한일기본조약의 경우, 최근에도 “졸속협약”이라는 비판을 받는 논쟁적 주제이다.³⁾ 하지만 보다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해 다각적으로 당시의 정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이 글에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기 전 한일교섭(韓日交渉) 양상을 살펴보고, 사토 에이사쿠가 한일국교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어떤 정치활동을 펼쳤는지 검토할 것이다. 주요 자료로는 한일회담외교문서와 사토에 대한 신문기사, 사토의 일기 등을 활용할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의 역사적 인물 중 하나인 사토 에이사쿠를 중심으로 현대 한일관계사를 새롭게 복원하는 한 작업이 된다.

-
- 2) 李炯喆, 〈佐藤榮作の対外認識とアジア政策〉, 《県立長崎シーボルト大学国際情報学部紀要》 4, 2003; 谷川栄彦, 〈日韓基本条約と池田・佐藤外交〉, 《法政研究》 39, 1973; 加藤淳平, 〈戦後日本の首脳外交〉, 《外務省調査月報》 1, 2002; 原朗, 〈日韓会談と日韓国交回復〉, 《三田学会雑誌》 109(2), 2016.
- 3) 한일기본조약의 쟁점 관련 연구는 이원덕, 〈한일관계 ‘65년체제’의 기본 성격 및 문제점〉, 《국제·지역연구》 9(4), 2000; 김웅희, 〈한일기본조약의 의의와 한계〉, 《日本研究論叢》 43, 2016; 吉澤文寿, 〈日韓国交正常化と残された課題〉, 《季刊戦争責任研究》 66, 2009 참조.

II. 한일기본조약 이전 한일교섭

1. 1950년대 한일교섭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동아시아는 미국과 소련이 대치하는 냉전 시대가 시작되었다. 게다가 1949년에는 중국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이 타이완으로 밀려나면서, 중국 본토 전역이 공산화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불과 수년 전 치열하게 교전했던 일본을 철저히 비군사화하고 민주화시키려던 기존의 점령정책을 재고하게 되었다. 소련과 중국의 인근 섬나라인 일본에 대해 공산진영에 맞설 방과제 역할이 가능한 국가로 재인식하게 된 것이다. 1950년 한국전쟁은 이러한 미국의 일본 인식을 확고하게 했으며, 동아시아의 평화와 힘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일본의 재군비가 고려되기도 했다.

냉전의 국제정세 하에서, 1951년 9월 연합국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주권을 회복한 일본은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안보체제를 함께하게 되었다. 공산진영에 대항하는 축을 형성하려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필요로 했고, 이는 한일회담 개최의 한 배경이 되었다. 1951년 10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연합국최고사령부의 주선으로 한일회담 예비회담이 개최된 사실은 한일관계 개선 시도가 미국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⁴⁾

이후 1952년 2월 제1차 한일회담이 김용식(金溶植) 주일한국대표 부공사와 마쓰모토 슌이치(松本俊一) 외무성고문을 대표로 하여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양국의 기본관계, 한국과 일본 양측의 청구권문제, 재산권문제, 재일조선인의 국적 및 대우에 대한 문제, 어업권문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교섭이 진행되었다. 한국 측은 36년간의 일제강

4) 유지아, <한국과 일본에서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전개과정과 역사적 의의>, 《한일관계사연구》 53, 2016, pp.271-272.

점기에 대한 민족적 반감을 바탕으로,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협정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일본인의 한국 내 사유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소위 역청구권을 주장했다. 이는 한국 측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고, 양국의 교섭은 결렬되었다.

그럼에도 미국은 한국과 일본 양국을 중재했고, 1953년 1월 이승만(李承晩) 대통령과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총리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이에 힘입어 1953년 4월에 제2차 한일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양국 간 교섭은 진전되지 못했고, 7월에 휴회되었다. 이 회담에서는 특히 어업문제에 대한 대립이 대두되었다. 한국이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평화선)'을 통해 해양경계선을 획정하고, 경계를 넘어온 일본어선을 나포하는 등 일본인의 어업활동을 제한한 것이 그 갈등의 주된 배경이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협상에 관해서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에 대한 일본의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⁵⁾

휴회되었던 제2차 한일회담은 1953년 10월 재개됨으로서 제3차 한일회담으로 이어졌다. 이 회의에서는 일본 측 대표였던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郎)가 “일본은 36년 동안 한국을 강제점령 하면서 한국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다.”라는 발언 등으로 한국 측의 공분을 샀다. 한국 측에서는 구보타 발언에 반박하는 성명을 내고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 측은 응답하지 않았고, 양국 간 교섭은 장기간 중단되었다.⁶⁾

제3차 한일회담이 1953년 10월 결렬된 후 4년 반 정도가 지난 1958년 4월, 제4차 한일회담이 개최되었다. 회담이 성사되기 전 예비교섭 단계였던 1958년 1월 8일,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총리가 이승만 대통

5) 原朗, 〈日韓會談と日韓國交回復〉, 《三田学会雑誌》 109(2), 2016, pp.165-166.

6) 《한일회담외교문서》, 제3차 한일회담, 〈THE CASES OF BREAK-OFF KOREA-JAPAN CONFERENCE〉(1953.12.)

령에게 “선린우호관계에 입각한 조기합의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⁷⁾ 3일 뒤인 1월 11일 이승만 대통령 역시 주일대표부공사에 대한 지시사항에서 “일본이 한국의 재산권과 주권 문제에 대한 강경한 주장을 철회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상호 우정과 신뢰의 정신을 보이며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다.”라며 한일 수교에 대해 신중하지만 의욕적인 태도를 보였다.⁸⁾

한일 양국 정상이 이처럼 한일회담 재개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게 된 배경은, 1957년 12월 일본이 이른바 “구보타 발언”을 철회하고, 재한 일본인 재산 청구권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다. 이를 고려하여 한국 역시 대일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합의했고, 한일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조정했던 것이다.

제4차 한일회담에서는 기본관계·한국청구권·어업·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등 4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교섭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나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고, 같은 해 7월에는 기시 노부스케 총리도 미일안보조약 개정 반대운동으로 인해 사퇴했다.⁹⁾ 이로 인해 장기간 중단되었다가 가까스로 재개된 한일교섭은 결국 다음 정권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2. 1960년대 한일교섭

4.19혁명 이후 한국에는 장면 내각이 성립되고 일본은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내각이 기시 내각의 뒤를 이었다. 한일 양국의 정권이

7) 《한일회담외교문서》, 제4차 한일회담, 〈이승만대통령에게 보내는 기시 수상의 서신〉(1958.1.8.)

8) 《한일회담외교문서》, 제4차 한일회담, 〈주일대사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사항〉(1958.1.11.)

9) 原朗, 앞의 논문, 2016, pp.166-167.

이제 막 교체된 상황에서, 1960년 10월 제5차 한일회담이 시작되었다. 이 회담에서는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문제,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반출해 간 문화재 반환 관련 실태조사 협의 등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평화선 및 어업문제에서는 양국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고, 대일청구권 관련 문제도 해결되지 못했다.¹⁰⁾ 때문에 이후의 한일회담은 1961년 5.16 군사정변을 통해 등장한 박정희(朴正熙) 정권과 이케다 내각 사이의 과제가 되었다.

1961년 5월 26일 미국은 박정희 정권을 승인하기로 하고,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이 한미 우호관계를 확인하는 서한을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게 보냈다. 일본에서는 6월 20일 이케다 총리가 미국에서 케네디 대통령과 회담한 후에, 박정희 정권에 대한 공식적 지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61년 10월부터 제6차 한일회담이 진행되었으며, 회담기간 중인 1961년 11월 11일~12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도쿄를 방문하여 이케다 총리와 한일 수뇌회담을 가지기도 했다.

박정희 정권이 중단되었던 한일회담을 서둘러 재개하고 협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도 상황을 진전시키고자 보다 활발하게 개입하기 시작했다. 한국과 일본의 사정을 익히 알고 있던 주일미국대사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가 주일한국대표부 및 일본 정계인사들과 접촉했고, 러스크(Dean Rusk) 국무장관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양국의 국교정상화를 위해 암암리에 관여하며 일종의 ‘거중조정’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러스크는 1961년 11월 2일 ‘미일 무역경제 합동위원회’에 참석하여 이케다 총리와 회담하며 한일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러스크는 그 회담에서 일본이 대일청구권 문제를 조속히 타결하고, 동아시아 정세를 개선하기 위해 대국적 견지에서 한국의 정치경제 안정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¹¹⁾

10) 《한일회담외교문서》, 제5차 한일회담, 〈한일회담의 진전상황〉(1961.2.20.)

11) 안소영, 〈한일회담 핵심 문서 해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일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각국 인사들의 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자민당의 한일문제간담회는 1962년 1월 25일 모임에서 한국과의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한국과의 경제협조를 촉진할 것을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국산 쌀을 구입하여 대한통상을 촉진하고 한국의 천연자원개발에 협조하며, 한국과 일본 간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대일청구액에 대해서는 일본이 무상원조와 차관을 각각 어느 정도 한국에 제공할 것인지 그 액수를 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한일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일본국민에게 계몽시킬 것을 합의했다.¹²⁾ 반면 한국 외무부 당국자는 2월 4일 ‘선국교후경협’이라는 정부의 대일 기본원칙, 즉 청구권문제나 어업문제 등 한일 양국 사이의 현안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는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혁명정부의 기본방침이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는 박정희 의장이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민간의 경제거래나 지원적 자본은 구태여 막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한 오해를 우려한 것이었다.¹³⁾ 이렇듯 한일국교정상화 문제에서 청구권 문제는 여전히 핵심적인 사안이었고, ‘경제’는 이전보다 더 뚜렷한 화두가 되어 있었다.

1962년 3월 청구권문제에 대해 한일 외무장관 회담이 열렸다. 일본 측은 청구권 7000만 달러, 경제협력 2억 달러의 액수를 제시했고, 한국 측은 7억 달러를 제시하여 양측 주장의 현격한 차이가 재확인되었다. 그해 8월 예비교섭에서 일본 측은 ‘청구권’ 명목의 배상이 아닌, 유상과 무상의 ‘경제협력’ 형태로 한국에 지불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대일청구권은 그 본질과 사정에 따라 청구권 명목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청구권의 틀 안에서 변제라는 명목과 무상지급 금액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렇듯 한일 양측이 타협안을 내고 교섭하는 상황에서, 1962년 11월

본 방문), 《일본공간》 2, 2007, pp.172-175.

12) “國交前이라도大韓經協促進”, 《동아일보》(1962.1.27.)

13) “先國交·後經協 外務部當局, 對日政策不變言明”, 《경향신문》(1962.2.4.)

12일 김종필(金鐘泌)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외무상 간에 청구권 관련 구체적 액수를 타결하기 위한 회담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이른바 ‘김종필-오히라 메모’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무상공여 3억 달러, 유상정부차관 2억 달러, 민간상업차관 1억 달러 이상이 합의되었다.¹⁴⁾ 이 회담에서는 분명히 규정되지 않았거나 한일 양국 간에 상반된 견해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것도 많았다. 즉 최종적인 합의안이 아닌 원칙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에 불과했다. 다만 ‘김종필-오히라 회담’을 통해 청구권문제를 경제협력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합의는 잠정적으로 이루어진 셈이었다. 특히 민간 상업차관은 즉각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한 것은 본격적으로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¹⁵⁾

이후 어업문제 등 현안문제 해결과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한일 양측은 실무회담은 물론 고위 정치회담까지 개최하며 교섭을 지속했다. 특히 어업문제는 청구권문제만큼이나 한일 양국이 오랜 기간 논의해왔던 현안이었다. 어업문제 타결에 있어 한국 정부는 한국 연안으로부터 40마일 이내의 수역을 한국의 독점적 관할수역, 즉 전 관수역으로 하고 그 외의 수역을 어업협정 대상 수역으로 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어업관련 한일 경제협력과 한일 합판 회사 추진을 통해 한국 어업의 여건개선과 기술습득을 도모하고자 했다.¹⁶⁾ 이와 관련하여 1963년 7월 30일, 양국의 외상회담 이후 김용식 외무부장관이 발표한 다음의 공동성명이 주목된다.

“한일 양국은 양국 어민의 이익에 합치된 합리적인 어업협정을 체결하므로써 한일 간의 어업문제를 조속히 또한 원만이 해결할

14) 原朗, 앞의 논문, 2016, p.167.

15) 신재준, <국교정상화 전, 한일경제협력 논의의 전개와 성격>, 《역사학보》 238, 2018, p.357.

16) 《한일회담외교문서》, 본회의 및 소위원회, <평화선 문제에 관한 야국 정부의 기본정책>(1962.1.23.)

것에 합의하였다. 한국 측으로부터 관계 수역에 있어서의 어업자원의 보존을 위한 적절한 규제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일본 측은 동 조치가 양국에 공평히 적용되고 또한 실시 가능한 한 이를 채용할 용의가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일본 측은 한국 측의 요청에 응하여 한국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각반의 어업협력을 행할 용의가 있음을 명백히 하고 이를 위하여 금후 더욱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김 장관 및 “오히라” 대신은 금차 회답이 쌍방의 의견 소통을 위하여 극히 유익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금후 더욱 어업문제의 조기 타결을 도모하고 아울러 교섭 전반의 최종적 타결을 촉진할 것에 의견이 일치하였다”¹⁷⁾

위 공동성명서에는 구체적인 시일이나 전관수역 및 공동규제수역의 경계가 적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관계 수역의 어업자원 보존을 위한 적절한 규제조치를 취하기로 한일 양국이 협의한 점, 한국어업의 발전을 위해 일본 측이 어업협력을 협의하기로 한 점은 이승만정부가 선포했던 기존의 해양경계선에 변화가 생길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장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 양국의 교섭은 이승만 정부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공산진영에 대항하는 축으로 한국과 일본을 연대시키려는 미국의 의도가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당시 청구권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해 한일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회답은 별 성과 없이 결렬되었다. 1958년 대한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던 기시 노부스케 내각의 권유와, 이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호응으로 약 4년 반 만에 한일회담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1960년 이승만 대통령 하야와 기시 총리의 사퇴로 중단되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1960년대에도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한 미국의 압력은 여전히 존재했다.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청구권문제나 어업문제 등 민감한 현안 해결을 위한 의

17) 《한일회담외교문서》, 고위정치회담, <외상회담에 관한 공동성명서>(1963. 7.30.)

교적 노력을 계속하게 되었다.

Ⅲ. 사토 에이사쿠의 대한외교

1. 사토 에이사쿠의 정치활동

앞서 서술했듯 한국과 일본 외교라인이 장기간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국교정상화까지 여러 난관에 부딪혔다. 이러한 한일 양국의 외교적 상황이 어떤 계기로 빠르게 진전될 수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 일본총리였던 사토 에이사쿠의 정치활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사토의 생애를 먼저 살펴보고, 어떠한 시대적 배경에서 그의 한국에 대한 외교적 입장이 정립되었는지 파악할 것이다. 이는 사토를 통해 한일관계사를 고찰하기 위한 기본 작업이 된다.

야마구치(山口) 태생의 사토 에이사쿠는, 일본 정계의 거물 기시 노부스케의 동생이자, 요시다 내각에서 내각관방장관을 비롯한 여러 요직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그는 오랜 기간 운수 업무를 담당하는 관료 생활을 하다가, 패전 이후인 1948년에 요시다 시게루와의 인연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정계에 투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⁸⁾

정계에 입문하기 전 사토 에이사쿠의 생애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국 일본 시대에 청년시절을 보낸 사토 에이사쿠는 1923년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고 이듬해 철도성(鐵道省)에 입사했다. 철도성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급증한 운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관청으로, 사토는 이곳에서 1개월 간 수습기간을 거쳐 큐슈 지방의 모지철도국(門司鐵道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10년 정도를 근무

18) 戶川猪佐武, 《佐藤榮作と高度成長》(東京: 講談社, 1982). pp.128-136.

한 1934년에 그는 모지철도국 재외연구원으로 임명되어, 미국과 유럽을 약 1년 8개월 동안 체류하며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특히 사토는 파견기간 중 가장 긴 10개월을 미국에서 체류하며 영어를 공부하고, 자동차사업에 대한 연구를 위해 민간기업 포드를 견학하는 등 미국에 대한 견문을 넓혔다. 당시 미국은 대공황으로 인해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의 뉴딜정책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였다. 이 재외연구원 경험은 사토 에이사쿠의 미국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일본 군부의 침공으로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일본은 전시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 1941년에는 일본의 진주만 폭격으로 태평양전쟁이 시작되었다. 사토 에이사쿠는 전시체제 하에서 주로 물자수송 업무를 수행했는데, 철도성과 체신성(遞信省)이 통합된 운수통신성(運輸通信省)에서 자동차국장으로서 전시수송을 담당했다. 1944년에는 오사카 철도국장으로서 부임하기도 했다. 패전 후 도쿄로 상경한 사토는 1947년 2월 운수사무차관에 취임했으나 이듬해 3월, 요시다 시게루가 이끄는 민주자유당에 입당하면서 공직생활을 끝내고 정치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¹⁹⁾

이상과 같이 사토 에이사쿠는 재외연구원으로서는 미국에 대한 견문을 넓혔던 경험이 있었고, 전시체제에서는 본토에서 물자수송을 담당하며 대미전쟁의 최전선에서 벗어나 있었다. 또한 일본이 패전한 상황에서 친미성향의 요시다 시게루가 이끄는 민주자유당에 입당했다. 이것은 향후 동아시아에서 반공진영을 구축하고자 한일국교정상화를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 사토가 협조적으로 응하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사토 에이사쿠는 정치생활 초기부터 요시다 시게루에게 중용되었다. 1948년 10월 제2차 요시다 시게루 내각이 성립된 후, 사토는 내각관방장관으로 파격 발탁되었다. 내각관방장관은 총리를 보좌하며 내각의 주요 정무를 기획 및 조정하는 요직이었다. 그는 1950년 새롭게

19) 村井良太著, 《佐藤栄作》(東京: 中公新書, 2019), pp.10-40.

결성된 자유당에서 간사장으로 취임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높였으며, 요시다 내각 말년이었던 1954년에는 요시다 총리와 미국, 유럽, 남아시아 등지를 여행하며 민주주의 국가와의 협력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도 했다.²⁰⁾

1958년 6월에 사토는 그의 형 기시 노부스케가 이끄는 내각에서 재무를 담당하는 요직인 장상(藏相)으로 임명되었다.²¹⁾ 앞서 언급했듯 기시 노부스케는 담보상태에 있던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일에 의욕적이었던 총리로서, 1958년 4월 한일회담이 재개되도록 힘쓴 바 있다.

이렇듯 요시다 내각과 기시 내각에서 요직을 역임하며 형성된 사토 에이사쿠의 정치노선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개선에 대한 입장에서 드러난다. 그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신문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岸·石井氏等은 지난 十一日 船田中, 野田卯一, 田中龍夫, 北澤直吉氏等 自民黨重鎮과 澤田 韓日會談日本側首席代表와 會合하여 韓日會談 關係의 現況을 討議한 後 ‘日本の 平和와 安穩을 確保하기 爲해서는 韓國과 臺灣이 共產陣營의 勢力下에 들어가는 것을 絶對로 沮止해야 된다.’는 決定을 내려 韓日會談에서 日本側이 더 많은 讓步를 하더라도 韓日會談을 成功시켜야 한다는데 同意하였다. 이러한 決定은 日本政界의 老壯級인 大野伴睦, 佐藤榮作, 藤山愛一郎氏等에 의해 絶對支持를 받고 實地行動으로 나오게 된 것이라 고 報道되고 있다.”²²⁾

해당 기사는 당시 일본정계가 공산진영 세력 확대 저지를 대한관계 개선의 주된 이유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즉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공산진영으로부터 일본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양보를 하더라도 한일회담은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20) 위의 책, pp.44-68.

21) “外相에 藤山氏留任”, 《조선일보》(1958.6.24.)

22) “日, 對韓關係 改善에 積極”, 《경향신문》(1961.4.22.)

의견에 사토 에이사쿠는 절대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老壯級’이라는 표현에서 미루어 볼 때 사토 에이사쿠는 한일국 교정상화에 적극 찬성하는 인물 중에서도 영향력이 강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자민당 내에 설치하기로 한 한일문제간담위원회 위원 25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²³⁾

5.16 군사정변으로 한국에서 박정희 정권이 성립된 후에도 일본 정계, 특히 자민당 내에서는 한일문제 해결 및 양국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다만 그 방법이나 태도에서 적극적인 인사들과 소극적인 인사들로 나뉘었다. 동아일보는 박정희 의장이 이케다 총리와 한일 수뇌회담을 열기 전인 1961년 11월 9일 보도에서 사토 에이사쿠를 소위 ‘친한파(親韓派)’로서 요시다 시게루, 기시 노부스케와 함께 ‘적극파’로 분류했고, 한일회담에 대한 ‘적극파’와 ‘소극파’의 기본 관점을 열거했는데 우선 ‘적극파’의 관점은 다음과 같다.

- 1) 이번會談은 十年동안을 끌어온 韓日兩國關係를 解決하는데 있어 가장 좋은 機會이다. 韓國政府는 強力한 意欲을 보이고 있으며, 朴議長이 領導하는 現韓國政府의 指導力은 어느때보다도 強力하다.
- 2) 朴議長이 領導하는 現政權이 失敗로 돌아간다면 韓國은 共產手中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
- 3) 韓國이 共產手中에 빠지게 되면 日本은 龍大한 額數의 國防支出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日本은 비록 상당한 액수의 財産請求額을 支拂해야만 하더라도 韓日關係를 可能的 限 早速한 時日에 解決하고 韓國을 支援해야 할 것이다.²⁴⁾

한일회담에 대한 ‘적극파’의 기본 관점에서 확인되는 것은 그들이 박정희 정권에 대해 교섭상대로서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23) “韓日問題 懇談委員 25名의 名單을 發表”, 《경향신문》(1961.4.28.)

24) “積極·消極兩派調停”, 《동아일보》(1961.11.9.)

점이다. 특히 1)과 2)에서 박정희 정권이 한국에서 공산진영에 대항 하는데 적합한 강력한 지도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3)에서 일본은 한국과의 교섭에서 많은 액수의 청구액을 지급해야 하더라도 조속히 한일관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을 지원하여 일본의 막대한 국방지출을 절감해야 한다.”이라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국방을 미국에 크게 의지하고 경제부흥을 우선 시하는 경무장주의인 ‘요시다노선’²⁵⁾의 방향성과 일정부분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듯 사토 에이사쿠는 그의 정치적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요시다 시게루 및 기시 노부스케와 ‘적극파’로서 뜻을 함께 했다. 이는 그들이 총리로 재직하던 시절의 정책적 기초를 사토 에이사쿠가 상당부분 답습하게 되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현안문제의 해결이라는 목표 외에, ‘요시다노선’ 계승이라는 정치적인 이유에서도 사토는 한일관계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들 ‘적극파’의 견해는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진행될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단지 한일 양국의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냉전체제 하 일본의 안보정책과도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게 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²⁶⁾

상기한 ‘적극파’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한일관계의 해결은 동의하지만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한 고노 이치로(河野一郎), 후지야마 아이이치로(藤山愛一郎) 등 ‘소극파’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 1) 日本의 現經濟狀態가 難境에 處해있는 한편 外貨保有量이 적다.
- 2) 某種의 政治的인 利害關係와 條件이 韓日協商에 附帶되고 있는 듯하다.
- 3) 이른바 政治的인 解決에는 一部 不合理한 要素들이 介在하고 있다.

25) 이형철, <사토 내각의 방위정책(1964~1972)>, 《亞細亞研究》 85, 1991, p.117.

26) 木宮正史, 《日韓關係史》(東京: 岩波書店, 2021), p.64.

- 4) 極東에서의 國際的인 緊張狀態를 惡化할 危險性이 介在하고 있다.²⁷⁾

‘소극파’는 일본의 경제적 사정을 우려함과 동시에 한일관계에 대한 정치적 해결에 의구심을 드러내며 그것이 모종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사토 에이사쿠와 고노 이치로는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서 경쟁하기도 했다. 때문에 ‘소극파’의 입장을 통해 사토의 한일국교정상화 의지가 일본 정계 내부의 권력대립과도 무관하지 않았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소극파’가 4)에서 극동에서의 국제적 긴장상태 악화가 우려된다고 한 것은, 일본이 공산진영과 직접적인 대립상황에 놓일 것을 경계하는 견해로서 당시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던 사회당의 견해²⁸⁾와 일정 부분 일치한다고 판단된다. 이는 한일관계 개선을 양국만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정세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적극파’와 ‘소극파’의 견해 차이는 한일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가라는 문제로 이어졌을 것이며, 사토로서는 조속히 추진해야 할 과업이었다.

2. 한일기본조약 조인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해 일본 정계 인사들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을 당시, 내각을 이끌고 있던 이케다 하야토 총리는 한일회담을 “서두르지 않으나 중단하지도 않겠다.” 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3선에 성공하여 연임이 확정된 후, 한일국교정상화 적극론자인 오히라 외무상을 경질하기도 했다.²⁹⁾ 즉 어느 정도 양보를 하더라도 한일국교정

27) “積極·消極兩派調停”, 《동아일보》(1961.11.9.)

28) 境家史郎, 《戰後日本政治史》(東京: 中公新書, 2023), p.63.

29) “池田 3選과 韓國”, 《경향신문》(1964.7.10.)

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적극파’의 입장과는 사뭇 달랐던 것이다. 이케다 총리는 3선까지 당선된 후 건강문제로 1964년 11월 퇴진하기까지 약 4년 4개월 정도를 재임했기 때문에, 한일기본 조약 조인 이전 1960년대 대부분의 기간을 집권한 인물이었다. 이케다 총리의 집권기간 동안 한일 간의 비공식회담을 비롯한 여러 교섭이 이루어졌으나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기에는 한일국교정상화의 조속한 타결에 미온적이었던 이케다 총리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이케다 총리 집권기간 중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던 사토 에이사쿠는 일찍이 한일국교정상화를 중요시했다.³⁰⁾ 그의 일기에 의하면 사토와 기시 노부스케는 한일교섭에 대한 이케다 총리의 의중이 불명확하다고 보았으며, 다음 날인 1962년 1월 5일 당해 첫 내각회의에서는 한일교섭과 관련하여 이케다 총리에 대한 비평이 있었다고 기록했다.³¹⁾ 이케다 내각이 개각을 진행할 당시에는, 신내각에서 한일회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회유하며 사토에게 입각을 권하기도 했다.³²⁾ 이 또한 사토가 한일국교정상화를 중시했음을 방증한다.

사토 에이사쿠는 일본 국내는 물론 해외의 주요 인사와 만나 한국과 관련된 사안을 의논하기도 했다. 1962년 10월 18일 그는 미국 백악관을 방문하여 케네디 대통령 그리고 해리먼(W. Averell Harriman) 국무차관보와 회견했는데, 해리먼과는 한일문제 타결 후 미국·일본·한국·대만·필리핀 5개국 회의를 열자는 의견을 나누었다.³³⁾ 이후 1963년 2월에는 주일미대사관의 초청을 받아 라이샤워 주일미국대사, 에머슨(John K. Emmerson) 주일미국공사와 오찬을 하며 한국의 정세에 대해 이야기했다.³⁴⁾ 같은 달에 사토는 이케다 총리를 개인적으로 방

30) “韓日會談 계속推進”, 《조선일보》(1963.4.9.)

31) 《佐藤榮作日記》第1卷(東京: 朝日新聞出版, 1998), p.497.

32) “韓·日交渉方針 不變”, 《조선일보》(1963.7.18.)

33) 《佐藤榮作日記》第1卷, pp.552-553.

문하여 한국문제에 대한 견해를 나누기도 했으며,³⁵⁾ 1963년 3월에는 일본에서 삼성물산 이병철(李秉喆) 회장을 만나 한국의 정세에 대해 이야기했다.³⁶⁾

이렇듯 사토 에이사쿠는 총리 취임 이전부터 한국문제에 관심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가 미국의 주요 인사와 한국에 대해 의논한 것은, 한일관계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조율함에 있어 사토가 핵심인물 중 하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1964년 7월, 이케다 총리는 3선에 성공하여 집권기간을 연장했으나, 같은 해 10월 25일 건강이 악화되어 총리직 사임의 뜻을 밝혔다. 그 후 차기 총리가 유력하다고 여겨지던 사토 에이사쿠와, 사토와 같은 ‘적극파’에 비해 한일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던 고노 이치로가 양대 후보로 거론되었다. 그러나 자민당 원로인 요시다 시게루가 사토 에이사쿠를 지지할 의사를 밝혔고, 후임 총리 지명의 핵심인물인 이케다 총리 역시 요시다의 의향을 따르기로 해서 대세는 사토 에이사쿠에 더욱 기울었다.³⁷⁾

결국 11월 9일 자민당은 의원총회에서 사토를 이케다의 후임 총리로 정식 지명했다. 사토 에이사쿠의 일본총리지명에 대해 한국에서는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홍종철(洪鐘哲) 공보부장은 “사토씨는 한일국교의 조기타결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일회담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³⁸⁾ 조선일보는 사토 총리 지명과 관련한 사설에서 사토 에이사쿠를 요시다 시게루→기시 노부스케→이케다 하야토를 잇는 일본의 보수정통파이자, 친형 기시 전 총리와 함

34) 《佐藤榮作日記》 第2卷(東京: 朝日新聞出版, 1998), p.33.

35) 《佐藤榮作日記》 第2卷, p.43.

36) 《佐藤榮作日記》 第2卷, p.50.

37) “大勢는 佐藤氏편에”, 《조선일보》(1964.10.30.)

38) “日首相에 佐藤榮作씨”, 《동아일보》(1964.11.9.)

게 매우 적극적인 한일회담 타개론자로 소개했다. 또한 한미일 삼각관계를 고려하여 사토 총리가 이케다 총리 시대를 답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욱 과단성을 발휘하여, 한일회담이 조기타결 될 수 있도록 하고 전후일본에서 새 시작이 되는 외교노선을 확립할 것을 기대한다고 서술하기도 했다.³⁹⁾ 그러므로 당시 한국에서는 사토가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한 원론적 지지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급한 외교현안으로 여기며 조속히 타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음을 알 수 있다.

사토 내각이 출범한지 불과 한 달만인 1964년 12월, 제7차 한일회담이 개최되었다. 그 해 4월 회담이 중단된 뒤로 약 8개월이 지난 때였다. 한일회담은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12월 23일에는 사토 총리가 직접 김종필의 형이자 한일은행 상무였던 김종락(金鍾路)을 만나기도 했다.⁴⁰⁾

1965년 2월에는 정일권(丁一權) 국무총리가 일본 총리 관저를 방문하여 사토와 회견했다. 양측은 한일회담을 조기타결 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했으며, 평화선 이후 새로운 수역설정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매우 달랐기에 사토는 당시의 답답한 상황을 일기에 기록하기도 했다.⁴¹⁾ 같은 달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 외무상이 서울로 건너가 일본의 과거 한국 식민지배에 대한 유감과 반성의 뜻을 표하며, 그의 한국 방문이 한일국교정상화의 조속한 실현에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⁴²⁾ 다만 2월 시이나 외무상의 방한을 계기로 한일기본조약이 가조인(假調印)된 후에도, 한국 측이 청구권 명목으로 지급받을 민간차관의 금리문제로 일본 측과 대립하는 등 세부적인 협상이 지체되기도 했다.⁴³⁾

마침내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이 어업협정, 재산 및 청구권

39) “佐藤日本新首相の選出과 우리의 期待”, 《조선일보》(1964.11.10.)

40) 《佐藤榮作日記》 第2卷, p.210.

41) 《佐藤榮作日記》 第2卷, pp.234-235.

42) “椎名 聲明要旨”, 《경향신문》(1965.2.17.)

43) “韓国側, 優遇迫る”, 《北陸中日新聞》(1965.3.29.)

문제해결과 경제협력협정,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문화재 및 문화협력 협정 등과 함께 도쿄에서 정식으로 조인되었다.⁴⁴⁾ 1952년 1차 회담부터 시작하여 13년 이상 끝났던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은, 사토 내각이 성립한 후 약 6개월 만에 기본조약 조인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듯 교섭이 조속히 진행되어 한일국교정상화까지 성사된 배경에는, 통킹만 사건 이후 공산진영에 대항하는 전선을 확대하기로 한 미국의 압력과, 고도성장 중인 일본의 잉여자본 투자처로서 한국이 중요해진 상황⁴⁵⁾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뿐 아니라, 당시 일본 정계의 수장이었던 사토 에이사쿠의 의지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사토는 관료시절부터 미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친미 성향의 경무장주의를 추구하던 요시다 시게루의 정치적 제자였다. 게다가 일본 정계에서 한일회담에 대한 '적극파'였기 때문에, 한일국교정상화를 조속히 타결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일기본조약은 한국에서는 굴욕적이라는 이유로 시민들의 반발을 초래했으며, 일본에서도 사회당이나 공산당을 비롯한 북한에 친근한 좌익세력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한일기본조약이 반공 군사동맹의 성격을 띠며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경제개발을 위한 한일관계 개선 의지가 뚜렷했으며, 냉전 상황에서 한일관계 진전은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미국에게도 필요한 일이었다.⁴⁶⁾ 그러한 국제정세에서 사토 내각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번 장을 종합해보면, 사토 에이사쿠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 철도국에서 관료로 일했고, 재외연구원으로 재직할 당시 미국에서 10개월간 체재하며 미국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혔다. 전후 친미 성향인 요시

44) 日韓 正式調印終わる, 《島根新聞》(1965.6.23.)

45) 谷川栄彦, 〈日韓基本条約と池田・佐藤外交〉, 《法政研究》 39, 1973, pp.572-574.

46) 五百旗頭, 《戦後日本外交史》(東京: 有斐閣, 2019), p.126.

다 시게루에 의해 내각관방장관으로 발탁되어 정치생활 초기부터 요직에 임하게 되었다. 이후 기시 내각에서도 요직을 역임했던 사토는, 그의 형과 마찬가지로 한일회담에 대한 ‘적극파’로서 한일관계를 조속히 해결하고 한국을 지원하여 공산진영에 대항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가 미국의 정치가들과 한국문제를 논의하고 이병철, 김종락, 정일권 등 한국의 정재계 인사와 꾸준히 회견한 것 역시 그 맥락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전임 총리인 이케다 하야토에 비해 한일관계 개선에 더 적극적인 입장으로, 사토 내각 출범 직후 한일회담을 재개한 지 약 6개월 만에 한일기본조약이 조인되는 한 배경이었다고 볼 수 있다.

IV. 나오는 말

이승만 정부 초기부터 시작된 한일 양국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은, 한국과 일본을 연대시켜 공산진영에 대항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 시기에는 청구권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해 한일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회담은 별 성과 없이 결렬되었다. 1958년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 추진한 기시 노부스케 내각과 이승만 대통령의 호응으로 약 4년 반 만에 한일회담이 열렸으나, 이승만 대통령 하야 및 기시 총리 사퇴로 중단되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1960년대에도 한국과 일본은 한일국교정상화를 성사시키고자, 청구권문제나 어업문제 등 민감한 현안 타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게 되었다.

이케다 내각 시기에도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으나, 일본 정계 내부에서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적극파’와 ‘소극파’로 나뉘었다. 이케다 총리는 한일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견지하면서도 ‘적극파’에 비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여 한일국교정상화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이케다 퇴진 후 성립된

사토 내각은 출범 한 달 만에 한일회담을 재개하여 한일국교정상화를 조속히 추진했고, 회담재개 후 불과 6개월만인 1965년 6월 22일 한일 기본조약 조인에 이르렀다. 그 배경에는 공산진영 대항세력을 형성하고자 한 미국의 한일회담 압력, 일본자본의 투자처로서 한국의 중요도 상승 등이 있었다.

그러나 전임 총리에 비해 한일관계 개선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이라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협조적이었던 사토 에이사쿠가 일본 총리로 집권한 것이, 한일기본조약이 조속히 조인될 수 있었던 주요 배경이었다고 생각된다. 즉 사토 에이사쿠는 국내외에서 여러 난관에 직면했던 한일국교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한일관계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한 인물이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 자료

《京郷新聞》

《東亞日報》

《朝鮮日報》

《北陸中日新聞》

《島根新聞》

동북아역사재단, 《한일회담외교문서》(contents.nahf.or.kr/id/kj)

《佐藤榮作日記》, 東京: 朝日新聞出版, 1998.

2. 논저

김용희, 〈한일기본조약의 의의와 한계〉, 《日本研究論叢》 43, 2016.

신재준, 〈국교정상화 전, 한일경제협력 논의의 전개와 성격〉, 《역사학보》 238, 2018.

- 안소영, 〈한일회담 핵심 문서 해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일본 방문〉, 《일본공간》 2, 2007.
- 유지아, 〈한국과 일본에서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전개과정과 역사적 의의〉, 《韓日關係史研究》 53, 2016.
- 이원덕, 〈한일관계 ‘65년체제’의 기본성격 및 문제점〉, 《국제·지역 연구》 9(4), 2000.
- 이형철, 〈사토 내각의 방위정책(1964~1972)〉, 《亞細亞研究》 85, 1991.
- 戸川猪佐武, 《佐藤栄作と高度成長》, 東京: 講談社, 1982.
- 中島琢磨, 〈初期佐藤政権における沖縄返還問題〉, 《法政研究》 73(3), 2006.
- 五百旗頭, 《戦後日本外交史》, 東京: 有斐閣, 2019.
- 木宮正史, 《日韓關係史》, 東京: 岩波書店, 2021.
- 加藤淳平, 〈戦後日本の首脳外交〉, 《外務省調査月報》1, 2002.
- 吉澤文寿, 〈日韓国交正常化と残された課題〉, 《季刊戦争責任研究》 66, 2009.
- 谷川栄彦, 〈日韓基本条約と池田・佐藤外交〉, 《法政研究》39, 1973.
- 李炯喆, 〈佐藤栄作の対外認識とアジア政策〉, 《県立長崎シーボルト大学 国際情報学部紀要》 4, 2003.
- 村井良太, 《佐藤栄作》, 東京: 中公新書, 2019.
- 原朗, 〈日韓会談と日韓国交回復〉, 《三田学会雑誌》 109(2), 2016.
- 宮川徹志, 《佐藤栄作最後の密使》, 東京: 吉田書店, 2020.
- 野添文彬, 〈1967年沖縄返還問題と佐藤外交〉, 《一橋法学》 10(1), 2011.
- 境家史郎, 《戦後日本政治史》, 東京: 中公新書, 2023.

※ 이 논문은 2024年 8月 15日 投稿 完了되어 2024年 9月 18日까지 審査委員들이 審査하고, 2024年 9月 23日까지 審査委員 및 編輯委員會議에서 掲載로 判定되었습니다.

Push ahead of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Japan by Eisaku Sato

Kim, Kyoung-Ho
(Yeungnam Univ.)

< Abstract >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fresh look at the history of modern Korea-Japan relations, focusing on Eisaku Sato, the Japanese prime minister at the time of the signing of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1965.

The Sato Cabinet, formed in November 1964, resumed talks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Japan within a month of its inauguration, and the two countries quickly normalized diplomatic relations, culminating in the signing of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June 22, 1965. This was largely due to the rise to power of Eisaku Sato, who was “a strong proponent” of improving relations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Japan Korea and cooperative with the United States' East Asian policy. In other words, Eisaku Sato pushed ahead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Japan, who announced a new beginning in the history of Republic of Korea and Japan relations.

Key Words : Eisaku Sato, Republic of Korea-Japan relationship, a strong proponent, Diplomacy,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Japan